

「2020-6호」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0. 9. 3.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 EU 경제회복기금 합의: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합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2. 재정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3. 예산·재정 관련법령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4~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존과 협력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방안 • 소극적인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위험 •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 • ‘그린뉴딜’ 그리고 강원도 •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2.0 시대의 환경변화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관계부처 합동 강원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DB미래전략연구소 기획재정부
5. 예산·재정관련 뉴스브리핑 (8~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시행 •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 2021년 예산안 • 지방세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한다 • 2021년 환경부 예산…그린뉴딜 선도하며 환경 안전망 강화 • ‘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30.6조원, 전년 대비 5.1조원 증가 • 신북방 교역 중심항만 ‘동해신항’ 개발 첫걸음 •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1. 경제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성장여건 변화 대응 재정전략을 중심으로

- (서론) 과거 고도성장을 거듭하던 한국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향후 급격한 인구구조, 산업구조 및 기후 변화에 직면하고, 경제구조의 변화는 민간의 창의적 혁신노력과 함께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재정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재정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쟁점사항)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소득세수 감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심화로 기업 이익률 하락 시 법인세수 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화석연료 사용 감소 시 교통·에너지·환경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 대응 재정지출 증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 재정 지원 증가가 예상됨
- (구조변화에 따른 및 대응전략)
 - ① 인구구조 변화 대응(복지·고용 중심): 공적연금에 대한 주기적 재정계산 실시 후 제도 개선, 노인의료보장 관련 보험의 기금화 논의,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및 역할분담 명확화, 고령인력의 고용유지, 외국인 인력수급 관리 등
 - ② 산업구조 변화 대응(과학기술 R&D·노동시장 중심):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의 전환, 건강·안전·환경 등 사회적 난제해결에 대한 정부 R&D 확대,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 ③ 기후변화 대응(에너지분야 중심): 오염배출자부담원칙 적용 관련 탄소세 도입, 대기업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조정, 에너지공급자 재정지원 등

[바로가기](#)

■ EU경제회복기금 합의: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국회입법조사처

- (들어가며) 2020년 7월 21일 유럽연합(EU) 회원국은 7천 5백억 유로(EU의 5년 예산에 달하는 규모)의 경제회복기금(EU Recovery Fund) 구성에 합의함
- (코로나19와 EU 경제회복기금 조성)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EU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 증가에 따른 기금 조성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의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하나, 기금의 총액과 배분 등 세부내용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은 지속되는 상황임. 한편, 기금 중 89.6%는 코로나19 피해회복·복구시설에 투입될 예정으로 기금의 70%는 2021~2022년에 나머지는 2023년에 집행할 계획임.
- (경제기금 논의로 드러난 EU의 고질적 문제) EU의 구심점 역할 부족과 회원국들의 어려운 합의 도출 체계 문제, 일부 유로존 국가(남유럽)의 취약한 재정구조, 회원국들의 EU 예산부담금 부담 증가 등이 있음
-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향후 경제회복기금 조성 및 실행 결과에 따라 EU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회복기금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경우 EU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어 우리나라도 EU에 대한 협력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EU와의 무역관계에서 그린딜(EU의 주요정책) 관련 압박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며, 독일·프랑스(기금 조성 주도)와의 외교관계를 강화 또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기획재정부

- (수립방향) 조세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그간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경제·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한 코로나19의 영향 등 여건 변화를 세입전망, 세부 정책방향 등에 반영함
- (조세정책 여건) 경제·구조적 여건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성장·분배 측면의 어려움 확대, 향후 우리경제의 도전요인인 구조적 변화도 심화·가속화될 전망, 재정 여건은 재정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나 세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 조세부담률은 상승 추세지만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임
-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조세환경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경제사회 구조적 대전환, 재정지출 소요증대” 라는 3중 도전 요인에 처해 있으나, 저성장·양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함
-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향) 경제활력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 강화, 국제감면한도 준수,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선정 기준 보완 등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제고함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수립대상)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 (대상기관) 총 39개 기관(공기업 23개, 준정부기관 16개) *밑줄: 자본잠식 기관

요건	개수	공공 기관
자산2조원 이상	총 3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 22개(LH, 한전, 도로, 한수원, 가스, 수자원, 철도, 석유, 인천공항, 발전5사, 주택보증, 지역난방, 부산항만, 한국공항, 강원랜드, 광물, 인천항만, 마사회) • 준정부기관 : 15개(건보, 예보, 사학연금, 철도시설, 공무원, 중진공, 주금공, 장학, 농어촌, 신보, 국민체육, 무보, 캠프, 기보, 산단공)
정부 손실보전	총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공사(공기업), 고트라(준정부기관)

- (주요내용) 기관별 향후 5년간 경영 목표, 투자 방향, 연도별 자산·부채 등 재무전망
- (관리방향)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정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둔 계획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반영하는 한편, 주거복지로드맵, 한국판 뉴딜 등 정책 소요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안전 강화에 필요한 투자를 적극 반영함
- (재무전망) 국가 인프라 확충 등으로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재무현황은 5년간 자산은 150.6조원, 부채는 94.2조원 증가하여 2024년에는 자산 975.1조원, 부채 615.8조원, 부채비율은 171.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계획) 무분별한 사업 확대 및 과도한 차입관행·충당부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관별 재무건전성 관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바로가기](#)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시행 '20.8.11.)

법제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인력의 인건비에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5이상을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0년까지에서 2023년까지로 3년 연장함

[!\[\]\(74d4806277d7e73349d8e8c0897931e9_img.jpg\)바로가기](#)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시행 '20.8.12.)

법제처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20.8.1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취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 방법 및 일시적 2주택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8bba887393ca45b761e5cb49e755e762_img.jpg\)바로가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개정·시행 '20.8.12.)

법제처

-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등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특례 적용 시 임대면적, 주택 호수, 임대기간 외에 가격기준을 도입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요건을 보완함
- 또한,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강화를 위하여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을 발표함. 이에,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적용함

[!\[\]\(0fb13ad0bfa3d86868cdd3883e5665b3_img.jpg\)바로가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 '20.8.11. 시행 '20.8.12.)

법제처

-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신설,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점검결과 공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시장의 안전시설물 등 점검결과의 공개범위 및 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e50091943b385fe16d3277389202856f_img.jpg\)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공존과 협력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방안

-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필요) 호혜, 자조 등의 사회적 목적을 경제활동에 연계시키는 포괄적 개념인 사회적 경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도 채택, 사회적 경제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을 위한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념에 대한 이해 및 경험 제고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사회적 경제 당면 문제)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정부의 인증과 육성 제도, 목적사업, 사회서비스 범위, 취약계층 고용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이 대두되고 있어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정책기조가 변화되고 있음
- (공존과 협력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방안)
 - ①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사회적 경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②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실현을 모두 수행할 창조적·사회적 경제주체 역량 강화
 - ③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담보할 네트워크 구동
 - ④ 시민들이 다양한 경험 축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단계별 사업 서비스 지원 방안 수립

* 공존과 협력단계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 공공부문 및 시장 영역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공존하는 단계를 의미하며, 이는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갖추고 독자적인 생태계로 자립하는 것을 의미함

[바로가기](#)

■ 소극적인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위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어 생물학적 생존을 보장하는 가운데 재정정책으로 경제적 생존도 뒷받침해야 하는데, 만약 재정건전성 우려 때문에 재정정책이 제약을 받으면 방역과 경제 사이의 선택이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됨
- 재정정책 결정 시에는 재정건전성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재정건전성 우려의 합리적 근거는 국가채무 비율의 현 수준 대비 상승 폭이 아니라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각각이 초래하는 국가채무 비율의 상호 비교이어야 함
- 이러한 방식으로 유로존 재정위기 사례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출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정건전성이 덜 악화되었으며, 빈곤·자살률 등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 대공황의 심각성에 비견되는 현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미국 뉴딜 정책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념이나 기존의 경제학적 도그마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재정정책을 신속하게 시도한 후 정책효과를 평가해서 개선하는 접근 방식이 요구됨
- 이와 더불어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공유함으로써 그 심각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정정책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4. 정책 및 연구

출처

■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 (추진배경) 기술전환, 디지털 혁신 및 저탄소 경제 전환 등으로 미래 직업구조의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법·제도개선, 인력양성 지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시장에서 신직업이 활발하게 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활성화방안)
 - ① 그간 발표한 4차례 대책 중 정부 발굴·육성지원 과제는 총 55개*(정상추진 과제 45개, 중장기 검토과제 4개, 지연과제 6개)로 이 중 시장수요가 크고 미래 대비 필요한 과제 3개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
 - * 기 발표된 주요 신직업: 2014~2019년까지 총 55개 발표
 - ② 최근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 중인 신직업 14개의 민간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법·제도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 마중물 역할을 통해 시장안착 유도

【 14개 신직업 발굴 현황 】

분야	직업명
융복합 신산업	스마트건설전문가, 융복합콘텐츠 창작자, 데이터시각화 전문가, 미래차 정비기술자, 녹색금융전문가, 커머스크리에이터
생활·여가·문화	육아전문관리사, 문화예술후원 코디네이터, 난민전문 통번역인, 산림레포츠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오디오북내레이터
재난·안전	민간인명구조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바로가기](#)

■ ‘그린 뉴딜’ 그리고 강원도

강원연구원

- (진화하는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은 당면한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패키지 형태의 공공정책 모듬으로, 과거 경제침체 극복 ‘뉴딜’에서 오늘날 기후문제 극복을 위한 ‘스마트 그린 뉴딜’로 진화함
- (한국형 그린 뉴딜의 추진배경) 국내 산업여건은 세계적 기후규제에 대응해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고, 만성적 샌드위치 산업구조와 코로나19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임
- (한국형 및 강원도형 ‘그린 뉴딜’의 동향) 국가는 2025년까지 디지털, 그린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3대 분야에 160조 원을 투자하는 28개 ‘한국형 뉴딜사업’을 제시하였으며, 강원도는 그린 뉴딜 분야에 8개 단위사업을 제안하여 수소경제 여건 구축과 수열에너지 단지 조성 2개 사업이 선정됨
- (강원도형 ‘그린 뉴딜’의 추진과제) 국가 그린 뉴딜 단위사업과 강원도 희망사업의 정합성을 높여야 하므로, 제시된 국가사업의 유치와 실행을 위한 조직, 제도, 전문인력 3박자의 구축과 편익의 지역이전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담은 전략 수립이 시급함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 (배경)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저탄소 경제 또는 탄소중립적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 전략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그린뉴딜 관련 논의) 그린뉴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장기적 경제 회복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논의로, 주요국과 다자기구는 최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코로나19의 영향 극복을 위해 환경친화적 경기부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그린뉴딜 관련 주요 분야별 특징) ‘유럽그린딜’ 등 국제사회의 그린뉴딜 관련 논의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대표 분야이자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지속가능한 수송 △순환경제에 대한 동향과 특징을 다룸(*전문 확인)
- (시사점) ① 코로나19 이후 주요 17개국의 경제회복기금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3조 5,000억 달러 규모가 친환경적인 투자로 분석되었으며,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향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재정 지원 계획에 주목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국제협력과 사업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② 한국판 그린뉴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금융 논의 참여를 통한 재원 조성 △취약계층 지원과 지방정부의 참여 활성화 △디지털-그린 융·복합 확대 △해외 진출 지원정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2.0 시대의 환경변화

- (뉴노멀 2.0 시대의 도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물가·저금리가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의 시대 변화에 따라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등장하였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과거 금융위기와 달리 금융·경제뿐 아니라 인류사회의 삶의 방식과 기준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변화된 모습을 ‘뉴노멀 2.0’으로 지칭하는 가운데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도래함
- (뉴노멀 2.0 시대의 환경변화)
 - ① 경제 측면으로는 기존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와 부채 증가로 금융시장에 불안이 발생할 수 있음
 - ② 사회 측면으로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비대면 사회·경제 활동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영향을 미쳐 비대면 활동의 일상화와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③ 국제적 측면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 애로 발생 등 글로벌화 취약성이 드러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어 무역규제를 시행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활방식과 경제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어 뉴노멀 2.0 시대의 환경변화에 대비한 사회 각 주체들의 대응방안이 필요함

[바로가기](#)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KDB미래전략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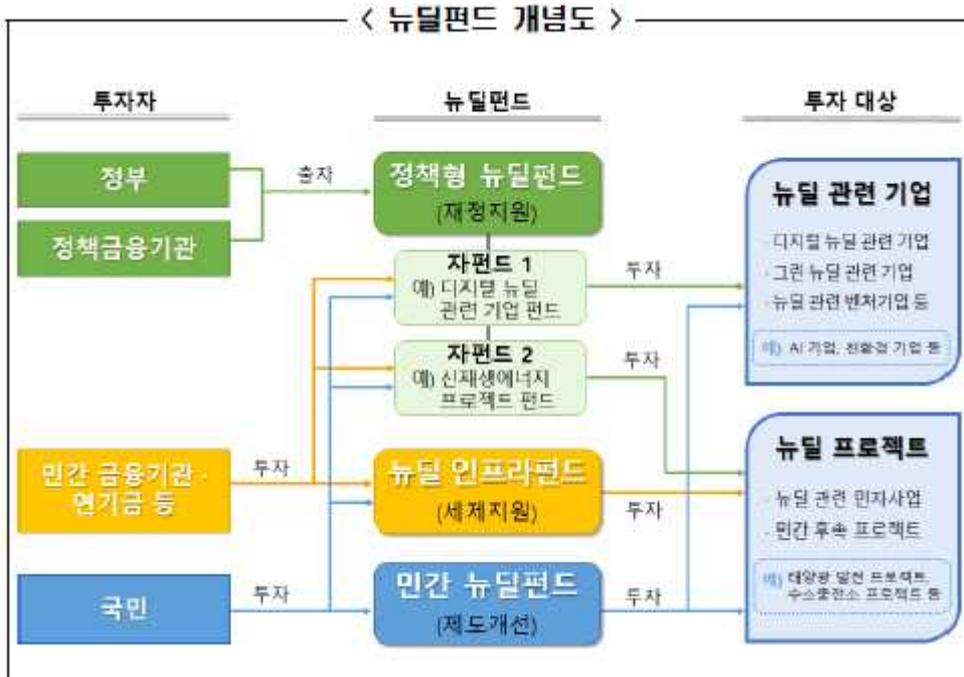
4. 정책 및 연구

출처

■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시중 유동성을 뉴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
- (조성·운용방안) ①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②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③민간 뉴딜펀드



- (펀드별 세부내용)

펀드명	세부 내용
정책형 뉴딜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하여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펀드 신설 ◦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하여 투자의 안정성 제고
뉴딜 인프라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조성·운용중인 민간투자법상의 펀드를 중심으로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 ◦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 적용)
민간 뉴딜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에 참여하도록 하는 펀드로 수익성 좋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임

-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뉴딜금융, 즉 뉴딜 프로젝트나 뉴딜 인프라는 물론 이와 연계된 전후방기업 및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병행 추진하고, 민간 금융회사들의 뉴딜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제약요인을 완화할 계획임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기획재정부

- * 보고서 구성: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고령화 대비 일자리 정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기술혁신
- OECD는 8.11.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 금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방역·위기대응 및 경제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긍정적 평가 내용 】

- ① 신속·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코로나19를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
- ② 적극적인 위기대응 정책으로 성공적 경제 운영
- ③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20년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1.2%→△0.8%)
- ④ 양호한 재정건전성 바탕의 확장재정 등 거시정책 긍정 평가
- ⑤ 한국판 뉴딜의 핵심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경기회복 기대 평가
- ⑥ 핵심 정책권고 중 다수가 한국판 뉴딜 과제에 포함
- ⑦ 삶의 질, 생산성 개선 등 정책권고가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기획재정부는 8.18.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등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함

-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승인(확정)→국회 제출
- ① 2021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②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활용(토지개발 사업지 4곳 신규 선정), 국유재산의 공익목적 활용 확대, 공공주택 공급노력 지속, 국유재산 가치 제고
- ③ 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 불요불급한 특례 신설 억제, 특례 일몰제 도입, 존치평가제도 시행, 미운용 특례 정비
- ④ 비상장 국유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96개 종목의 매각예정가격 재평가 결과 액을 토대로 공개매각, 매각대금 국고 세입조치 계획
- ⑤ 2021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 예산서: 예산안 부속서류로 '21년 국유재산특례 지출 예산규모는 9,968억원임
- * 국유재산특례지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양여 등 특례 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수입의 감소분을 의미함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시행

-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대규모 사업의 집행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함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이후, 대규모 사업비의 집행단계에서도 자의적인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하여, 공공기관이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정함
- 지침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및 관리절차, '타당성 재검토' 절차 신규 도입, '타당성 재조사' 등임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 (2021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①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 ② 뉴딜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 ③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예산” →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전략적 재원 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협업예산 등 재정혁신 추진
- (재정 총량) 총수입 483.0조원(전년 당초대비 +1.2조원, +0.3%), 총지출 555.8조원(전년 당초대비 +43.5조원, +8.5%), 재정수지 GDP 대비 △5.4%(전년 당초대비 △1.9% 악화), 국가채무 46.7%(전년 당초대비 +6.9%)
- (분야별 주요 재원배분)
 - ① 산업·환경·R&D-디지털·그린 뉴딜 핵심분야 → 12.3~22.9% 증가
 - ② 복지·일자리-고용·사회안전망 강화 → 10.7% 증가
 - ③ SOC-SOC 디지털화·안전투자 중심 확대 → 11.9% 증가
 - ④ 국방-스마트강군 구축, 軍 사기진작 투자 확대 → 5.5% 증가

[바로가기](#)

■ 지방세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한다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4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
-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관계법률 주요 개정내용 】

구분	주요 개정내용
코로나19피해 극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재설계) 농·어업분야 감면연장 및 재설계 1,393억원 ◦ (연장) 중소기업 지원분야 감면 일괄 연장 56억원 ◦ (연장)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일괄 연장 1.4조원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 20억원 ◦ (보완) R&D차량 등 미등록 차량 취득세율 명확화(취득세율 2%) ◦ (연장)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원 26억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시설 감면 연장 9억원 ◦ (연장) 노인복지시설 감면 연장 341억원 ◦ (연장) 국가유공자 대상 감면 일괄 연장 58억원
공정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화생활 상습·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명단공개 등)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확대 ◦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 방지규정 명확화
과세제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과세표준에서 제외) ◦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차종 분류-세율구간 신설 등)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 합리화
납세자 권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주민세 종류 간소화 등)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가산세·가산금 일원화 ◦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및 합리화(통지 기한 신설)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2021년 환경부 예산...그린뉴딜 선도하며 환경 안전망 강화

-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17.5%(1조 5,036억 원)가 증가한 10조 735억 원이며 이 중 그린뉴딜 예산안은 약 4조 5천억 원 규모로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고 있음
-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①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② 스마트그린도시, ③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④ 도시 훼손지 복원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 아울러, 기후 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 강화를 위해 수돗물 안전에서부터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예방·관리도 강화할 계획임

[바로가기](#)

환경부

■ '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30.6조원, 전년 대비 5.1조원 증가

-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20%(5.12조 원)가 늘어난 30.6조 원으로 25개 부처(청)의 179개 사업에 해당되며,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2년 연속 20% 이상 증액됨
- 고용노동부는 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 및 생계지원 본격 시행, ②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사람에 대한 선제적 투자, ③ 근로자의 고용안정·유지 및 대상별(청년·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④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보장 등에 중점 투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 신북방 교역 중심항만 '동해신항' 개발 첫걸음

- 해양수산부는 동해신항이 환동해권의 중심이자 대북방 교역의 거점항만으로 도약하는데 초석이 될 '동해신항 북방과제'를 8월 13일 준공한다고 밝힘
 - * 해양수산부는 선박 운항 지체 감소 및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신북방시대의 거점항만을 개발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조 6,724억 원을 투입하는 '동해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해 옴
- 북방과제는 태풍 등을 선제적으로 막아 동해신항에 새로 조성되는 최대 10만 톤급 7선석 부두의 정온한 항내 수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형 항만구조물로, 2016년 5월부터 약 4년 2개월 동안 총 3,663억 원을 투입하여 1,700m의 북방과제 축조를 완료함
- 이번 북방과제 완공에 따라, 동해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 운항은 물론, 동해항의 민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함

[바로가기](#)

해양수산부

5. 뉴스브리핑

출처

■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 지난 8.25.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됨
- 정부는 우리 경제에서 그 비중과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이자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함

법령	3법 제·개정안 주요 내용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제 개편 ◦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

- 3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임

[바로가기](#)